



2022 지방선거* HANDBOOK

2022 지방선거* HANDBOOK

2022 지방선거 HANDBOOK

발행일 2022년 4월 27일
발행인 정지강 희망제작소 이사장
편집인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연구책임 송정복, 박선하, 허웅

목차

발간사	05
지방선거 출마자가 알아야할 다섯 가지 논리와 스무 가지 법칙	06
희망제작소 소개	12
우리 삶의 행복을 더하는 50대 희망공약	24
당선자 워크숍 안내	60
목민관클럽 소개	62

발간사

함께 행복한 공동체 민선8기 지방정부를 바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여진이 계속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고,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사회의 생태적 전환은 더이상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박빙으로 끝난 대선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선8기 지방정부를 구성할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정부의 살림을 책임질 단체장과 이를 감시할 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시작된 우리 지방자치는 30여 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정치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국세 대비 지방세는 여전히 8:2 비율이고,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민이 직접 대표일꾼들을 선출하면서 행정의 문턱이 낮아졌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행복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습니다. 한때 무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지방자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지방자치가 분명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장치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임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2년간 목민관클럽을 통해 지방자치 혁신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시민의 자치권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로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전환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학교담장을 넘어 지역사회가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꿈꿀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변곡점’을 지나는 가운데, 격차와 갈등이라는 해묵은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혁신과 대안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50대 희망공약에는 목민관클럽을 통해 민선5~7기 지방정부에서 발굴된 혁신 사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지방정부가 미래를 견인하기 위한 대응 과제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책적 상상력과 열정을 자극하는 불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임주환

지방선거 출마자가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논리와 스무 가지 법칙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다.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선거는 전쟁이다. 무엇을 무기로 어떤 상대와 싸울 것인가.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압축 정리했다. 승리하시라. 그리고 좋은 정치하시라.

박성민 정치컨설팅 MIN 대표

5*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논리

첫째.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질문을 받든 30초 안에 세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없다면 정치할 생각 마라. 추상적 답은 금물이다. 예컨대“국가나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식의 답은 금물이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가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라.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그 이유가 형성된 것이라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둘째. 당은 나에게 왜 공천을 주어야 하는가

당의 공천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명분을 질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많은 후보들이 이 답을 하면서 범하는 오류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공천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는 자가당착이다. 핵심은 나를 공천하는 것이 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곧, 나를 공천하면 당이‘이런저런 논리로 언론에 설명하기 쉽다’는 식이어야 한다.

셋째. 나는 왜 승리할 수 있는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면 공천은 어렵다. 당이 아무리 여러 가지 공천 기준을 얘기해도 결국은 이기기 위해 공천하는 것이다. 당이 여론조사에서 인지도 및 지지도를 주로 참고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추상적 이유는 절대 금물이다. 예컨대‘평판이 좋다’는 식의 주관적 평가는 안 된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경쟁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다. ‘그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논리는 공천심사위의 반감을 살 뿐이다. 횡당한 표 계산은 절대 안 된다. 예컨대‘내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내 손으로 받은 아이가 몇 명이다’는 식의 계산법은 통하지 않는다.

넷째. 당선되면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공약이다. 그런데 출마자들이 가장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과거에 비해 대체로 구체성은 많이 보완됐지만 차별화는 쉽지 않다. 대개의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은 천편일률적이다. 그렇기때문에 조금만 공들여 차별화하면 공천심사위원 아니라 유권자, 언론을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예비후보 홍보물도 절반은 공약으로 채워야 하고, 선거기간 중 정책공약집을 세대수의 10분의 1만큼 배 포함 수 있다. 공약은 그만큼 중요하다.

차별화가 관건이다. 무조건 눈에 띄어야 한다.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하면서 공천과정은 물론 당선 후 활동계획서가 중요해졌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차별화한 공약으로 승부하라.

다섯째. 나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설명하라.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냥 학력이나 경력을 죽 나열하는데,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경력이 아니라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어떤 아픔과 슬픔을 겪은 사람인가에 따라 유권자들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진다. 가족사, 개인사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언론 보도자료로 뿌리고, 홍보물에도 담아라. 유권자는 딱딱한 정책보다 감동적인 휴먼스토리에 끌린다.

20^{*}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20가지 법칙

제1법칙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라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정치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약을 많이 제시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애써 모은 자료도 버리고, 알고 있던 것도 잊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해야 한다. 공약도, 홍보도, 유세도 단순해야 한다.

제2법칙 개인은 복잡해도 대중은 단순하다

대중이 항상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중이 항상 단순한 것만은 확실하다. 개인은 복잡해도 대중은 단순하다. 정치인이나 선거 출마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개인과 대중을 혼동하는 순간부터 캠페인은 실패하기 시작한다. 단순성은 핵심적인 속성이다.

제3법칙 텃밭이 불리하면 이길 수 없다

정당 지지도가 낮은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기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고르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인물도 도덕성도 아니다. 마음 속으로 어찌됐든, 막상 투표장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찍게 마련이다. 출마지역이 소속 정당의 텃밭이냐 아니냐 하는 점은 그래서 중요하다.

제4법칙 구도는 텃밭의 불리를 뛰어 넘는다

열세 지역이라 할지라도 구도가 유리하면 이길 수 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구도였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엘 고어가 조지 부시에게 패배한 것도 구도 때문이다. 구도는 텃밭의 열세 지역에서도 승리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이다.

제5법칙 지지자의 투표율이 핵심이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지극히 평범한 수만으로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문제는 누가 더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다. 결국 투표가 관건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지자의 투표율'이 선거의 승패를 가른다.

제6법칙 대중은 반대하러 투표장에 간다

대중은 지지할 때보다 반대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자주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중의 성격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후보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장에 간다. 반대만 잘 결집하면 지지기반이 없는 지역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제7법칙 정책이 아니라 이슈를 선점하라

선거 출마자들의 착각 중 하나는 정책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정책을 보고 투표를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중은 뻔뻔하게 채워진 정책이 아니라 한두 가지 이슈에 따라 투표한다. 어떻게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제8법칙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하라

대중은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대중은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한다. 대중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대중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대중은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한다. 대중은 같은 메시지를 수백 번 반복하는 정치인의 진정성을 이해해준다.

제9법칙 강하고 틀린 것이 약하고 옳은 것을 이긴다

적어도 정치 세계에서는 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이긴다. 합목적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을 이긴다. 정치, 특히 선거에서는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대중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가 고어를 이겼고, 노무현이 이회창을 이겼으며, 김영삼이 김대중을 이겼다. 선거는 그런 게임이다.

제10법칙 주도하라 아니면 반대하라

대중 정치인이 대중성과 함께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이슈 주도력'이다. 이슈를 주도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반대에 직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도하지도 반대하지도 못한 채 대세에 동조하는 정치인에게 대중의 지지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제11법칙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문제다

대중은 선거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다. 따라서 정치인의 과거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미래를 향한 이슈를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중은 미래에 커다란 가치를 창출해낼 정치인을 원할 뿐, 과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제12법칙 반대를 즐겨라

실패하는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한다. 반면 뛰어난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탁월한 정치인은 반대를 즐긴다. 위대한 정치인은 반대를 만들어 낸다. 반대가 많은 정치인은 반대 세력이 있어 힘을 유지한다. 반대가 없다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정치인들이여, 반대를 만들고 즐기고 이용하라.

제13법칙 어떠한 이슈도 회피하지 마라

정치인들은 대단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몰라 이슈를 회피한다. 정치와 선거는 상대를 두려워하면 이길 수 없다. 괜히 지레 짐작하고 겁부터 먹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당하는 것이다. 설령 자기에게 불리한 이슈라 할지라도 회피하지 마라. 피하면 패한다.

제14법칙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대중은 정치인들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원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르치려는 정치인을 경멸한다. 모든 대중이 엘리트가 되고, 모든 엘리트가 대중이 된 오늘날에는 대중이 정치인을 가르치는 상황이 되었다. 대중의 노선에서 벗어난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대중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제15법칙 분노하되 경멸하지 마라

대중은 분노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만 경멸하는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는다. 한국의 진보가 성장한 근거가 분노였고, 한국의 보수가 정권을 잃은 이유가 경멸이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분노했고, 이회창은 경멸했다. 경멸은 두려움의 반증이다. 두려움이 잉태해서 경멸을 낳고, 경멸이 장성해서 패배를 낳는다.

제16법칙 권력의지를 가져라

명분만 앞세우고 모든 것을 던지는 데 주저하는 정치인이, 정말 해보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을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말 하고 싶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 그리고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하라. 대중은 결연한 의지로 권력의지를 보이는 정치인에게 신뢰를 보낸다.

제17법칙 상대를 규정하라

선거는 규정하기 게임이다. 나를 규정하고, 상대를 규정하고, 선거의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 대중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상대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되는지, 왜 나를 찍어야 하는지를 정리해주어야 한다.

제18법칙 다른 것이 이긴다

아류는 이류다. 남의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대중은 정치인이 자기답게 싸우기를 원한다. 운동권 출신은 운동권 출신답게, 군인 출신은 군인답게, 기업인 출신은 기업인답게 싸우면 된다. 김치찌개에 설탕을 치려고 하지 말고, 커피에 소금을 타려고 하지 마라. 자기가 다른 것, 남과 다른 것이 강한 것이다.

제19법칙 대중의 말로 대중에게 말하라

정치는 말의 예술이다. 정치인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대중정치인은 대중이 쓰는 말로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한다. 정치인은 50대, 중학교 졸업 학력의 여성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쉬운 말을 두고 어려운 말을 쓰려는 엘리트 의식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말도 쉽게 바꿔서 말해야 한다.

제20법칙 사람 이야기를 하라

정치인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과 '추상적인 법, 제도, 정책을 말하는 정치인'으로 구분된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자유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사람은 결코 법이나 제도, 정책에 감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람의 이야기에만 감동한다.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면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

※ 본 원고는 2010년 지방선거 핸드북 자료에 실린 원고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 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시민의 희망을 연결하는 Think & Do Tank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와 함께합니다 *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다양한 문제를 살피고,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함께합니다 *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고 자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목민관클럽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의 사무국을 맡아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



'지방분권 희망후보' 100명을 소개합니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 약속

16.03.29 14:58 | 최종 업데이트 16.03.30 16:47 | 모소영 (bjnews)

좋아요 8개 +크게 | -작게 | 인쇄 | URL을 아가 | 스크랩

원고료도 응원하기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100명이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약속했다.

전국 풀뿌리지역연론 연대모임인 바른지역연론연대(회장 이만재, 육천신문 대표)는 29
망제작소와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
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28일 현재 100명의 후보들이 서명했다고 밝

'지방분권 희망후보' 100명

지방분권 과제 실천을 약속한
여야후보의 서명을 받고 그 명단을
유권자에게 공개

목민광장

목민관클럽 활동을 주기적으로
발신하는 목민광장



다양한 프로그램

주민이 지역 내 현안을 살피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교육,
공무원 교육 등



희망제작소는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책상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대안을 찾습니다.

비비정마을

마을의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면서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 활성화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사례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현장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관계가 사라진 삭막한 도시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마을이 학교다

지역 공동체와 마을에 관심을 갖고
진정한 마을살이 방법을 찾아보는
강연, 워크숍, 현장답사 프로그램

"마을이 학교다"는 내가 사는 마을에 관심을 갖고 가거서 할 일을 찾아내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꾸려가는 진정한 "마을살이"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이 학교다"는 강연과 워크숍,
현장답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희망제작소는 아래 원칙을 꼭 지킵니다.

독립 Independent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연구합니다.

실용 Pract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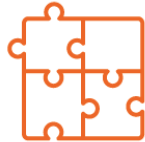
추상적이고 낭비적인 논쟁이
아닌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정책으로 만드는 실천적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종합 Comprehensive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법에서 거시대안과
담론을 찾아 우리 사회가 나아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안 Solution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문화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희망제작소와 시민이 만든 다양한 사회혁신 성과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Together

> 후원회원 신청

02-2031-2130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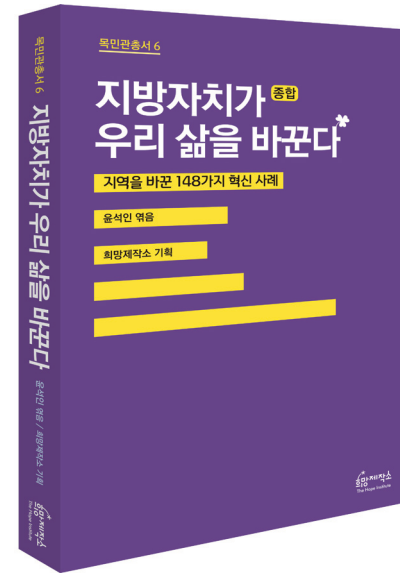
-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입니다.
-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www.makehope.org
- facebook.com/hopeinstitute
- 02-3210-0909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지방자치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종합판 출간



이 책에 실린 다양한 혁신사례들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더욱 꽃을 피우고,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바꾸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보다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져 지역의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자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김사열(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12년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준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발굴해 정리한 책이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00여명과 함께 하는 정책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며, 함께 고민하고 나눴던 혁신성구들을 12개의 소주제로 나눠 정리했다. 각 주제별로는 정책동향과 쟁점들을 정리하여 지방정부의 실험과 혁신 노력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해를 돕는다.

문의 송정복 팀장 | wolstar@makehope.org
박선하 연구원 | lea@makehope.org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목민관클럽
Local government club

우리 삶의 행복을 더하는 50대 희망공약



1. 시민주권시대로의 전환

- ① 자치헌장 제정
- ② 주민(마을)자치회 본격 운영
- ③ 주민참여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 ④ 협력적 민관협치 활성화

2.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사회

- ① 공공갈등조정제도 운영
- ② 시민배심원제 운영
- ③ 시민주도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운영
- ④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

3. 함께 사는 지역경제

- 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②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
- ③ 건강하고 활력있는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 ④ 사회적경제 제품의 공공 우선구매
- ⑤ 희망씨를 틔우는 골목상권 마을경제

4. 동네를 살리는 에너지전환

- ①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② 지역 에너지전환 거점센터 활성화
- ③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 ④ 온마을이 실천하는 재활용 & 새활용

5. 다음과 다음을 지키는 도시재생

- ① 스마트 압축도시 전환
- ②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 ③ 공감하는 골목만들기
- ④ 백년상권을 만드는 상생협약

6. 돌봄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 ② 동체를 살리는 지역재단 설립
- ③ 주민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 ④ 마을에서 찾은 어르신 일터와 쉼터
- ⑤ 온마을이 함께하는 아이돌봄

7. 학교혁신, 배움혁신

- ①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방교육자치모델 실현
- ② 학교밖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 ③ 마을에서 배우는 사람책과 '내일상상 프로젝트'
- ④ 평생학습도시, 책읽는 도시
- ⑤ 미래 인재를 키우는 디지털교육

9.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지키기

- ① 생활임금제 도입
- ② 비정규직 노동자,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11. 꿈꿀 수 있는 청년도시

- ① 청년기본소득, 청년수당
- ② 청년 창업공간 조성
- ③ 청년청 설치
- ④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8. 안전도시

- ① 리질리언스(Resilience)시티 구축
- ②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 ③ 재난·안전 통합자원관리
- ④ 시민안전보험 확대
- ⑤ 폭력예방 건강도시 구현

10.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도시

- ① 인권도시 헌장, 인권조례제정
- ② 아동, 여성친화도시
- ③ 장애인 이동권 실질적 보장
- ④ 공공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

12. 공공행정혁신

- ① 혁신적 인사 평가 시스템 구축
- ② 감사제도 개혁
- ③ 시민 옴부즈만 도입
- ④ 사회성과보상제 본격화

1. 시민주권시대로의 전환

- ① 자치현장 제정
- ② 주민(마을)자치회 본격 운영
- ③ 주민참여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 ④ 협력적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배경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3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미비한 제도와 한정된 자치권으로 2할의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민선5기부터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연구와 혁신, 주민참여와 협치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0년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면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 및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구성 다양화 등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참여를 명시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져서 보완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치분권형 개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시민자치권 향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예시 공약

① 자치현장 제정

- 지방자치의 주인이 시민임을 천명하며, 시민과 더불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의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조례 제정
- 시민자치의 기본원칙,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명시

〈참고사례〉

- *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 (2017.05.18.제정, 조례 제8127호)
- * 수원시 시민자치현장 조례 (2018.04.30.제정, 조례 제3790호)

② 주민(마을)자치회 본격 운영

-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마을 공동체별 생활자치 활성화를 통해 자치 실현

〈참고사례〉

- *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2017.12.28.제정, 조례 제2534호)
- *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03.30. 조례, 제1553호)

③ 주민참여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 정책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단계에 주민참여 명시
-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정책설명 및 토론헤정구제도, 회의자료 행정정보 공개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숙의공론장 운영

〈참고사례〉

- *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2011.02.28.제정, 조례 제3026호)
- *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2018.11.09.제정 조례 제1584호)

④ 협력적 민관협치 활성화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체계 구축 및 운영
- 민관협치회의 설치 및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협치사무국 설치 및 운영

〈참고사례〉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2016.12.29.제정 조례 제1392호)

2.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사회

① 공공갈등조정제도 운영

② 시민배심원제 운영

③ 시민주도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운영

④ 시민력을 키우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추진배경

2021년 여론조사²에서 전 세계 28개국 중 한국은 사회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조사됐다. 빈곤갈등(91%), 진보와 보수의 갈등(87%), 남녀갈등(80%), 세대간 갈등(80%), 종교간 갈등(78%), 대졸자와 비대졸자 간 갈등(70%) 등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경제 비용만 해도 한 해 수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격차와 갈등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우선 과제로 삼는 지방정부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민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광노필(2021.7.1.), '다이나믹 코리아'한국, 가장 격렬하게 '문화전쟁'느끼는 나라, 한겨레신문

예시 공약

① 공공갈등조정제도 운영

-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
- 갈등관리위원회 및 마을갈등조정단운영과 갈등예방 교육실시
- 공공사업의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 실태평가 실시

〈참고사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2014.04.07.제정 제1718호)

* 인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제도

- 2011년2월 '십정동 지역의 재건축'과정에서 송전선로 이전 설치관련 찬·반 주민들에 의해 5년 이상 끌어왔던 지역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제도화 함
- 2014년 관련 조례를 만들고 갈등관리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안) 마련하여 갈등관리를 체계화 함
- 부평구 직원 대상 갈등관리교육뿐만 아니라 주민대상 갈등관리교육 및 힐링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 공공갈등 사전진단 실시로 예방적 갈등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마을갈등조정단을 발족하여 공동체 갈등관리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음

② 시민배심원제 운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 혹은 반복되는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배심법정 운영
- 시민배심원 및 판정관 위촉, 시민배심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 등 운영

〈참고사례〉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2017.07.17.제정 조례 제4165호)

③ 시민주도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운영

- 시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 '리빙랩' 구축
- 시민이 생활속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참고사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0.29.제정, 제1521호)

* 춘천 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08.23.제정, 제1528호)

④ 시민력을 키우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공익활동주체의 발굴 및 양성, 역량강화교육, 정책개선 등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행

〈참고사례〉

*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12.18.제정 조례 제1895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2012.07.16.제정, 조례 제1064호)

3. 함께 사는 지역경제

- 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②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
- ③ 건강하고 활력있는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 ④ 사회적경제 제품의 공공 우선구매
- ⑤ 희망씨를 틔우는 골목상권 마을경제

추진배경

1990년대부터 대두된 '고용없는 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저성장 양극화 현상의 대두로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가 되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중앙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지역 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지만 선도적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별 고유 자산을 토대로 자립적·자구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립적인 지역경제발전론은 '지속가능발전'개념을 토대로 자연과 환경 보존의 틀 안에서 개발을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복지와 문화공동체 지향의 발전을 추구한다. 여기에 더해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사회적경제 제도가 정비되었다. 이후 정부인 증 사회적기업은 2021년 9월 3627개로 증가하였고, 협동조합은 2021년 10월 기준 2만 1540개로 증가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질적인 역량강화와 지역 밀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고 창출된 이익이 지역으로 순환되는 지역순환 사회적경제 모델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예시 공약

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 지역순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조사 및 기반구축, 인재육성 및 주민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참고사례〉

*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4.01.06.제정, 제2747호)

②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체계적 육성

-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조직 육성
- 사회적경제 기업의 프랜차이즈화, 규모화를 통해 시너지 창출
-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한 사회적 경제 지원

〈참고사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14.12.26.제정, 제1282호)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2.07.30.제정, 제8235호)

3 건강하고 활력있는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 안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참고사례〉

*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2020.06.12. 제정, 제3660호)

4 사회적경제 제품의 공공 우선구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마련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참고사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4.03.20. 제정, 제07044호)

5 희망씨를 틔우는 골목상권 마을경제

- 골목상권 마을경제 활성화 전담 조직 설치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상인 역량강화

〈참고사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산하 골목상권 교류센터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4. 동네를 살리는 에너지전환

- 1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2 지역 에너지전환 거점센터 활성화
- 3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 4 온마을이 실천하는 재활용 & 새활용

추진배경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지구촌 곳곳에 폭염과 가뭄, 폭우와 대규모 태풍 등을 일으키며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전 세계 인구 85%이상은 각종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대로라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2.7℃가량 상승해 생태계붕괴, 식량부족 등이 있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7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였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으며,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때이다.

예시 공약

①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
-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탄소중립도시 지정
-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참고사례〉

- *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09.16.제정, 제1549호)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1.04.09.제정, 제1506호)

② 지역 에너지전환 거점센터 활성화

- 지역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에너지센터의 설립·운영

〈참고사례〉

- *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당진시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 *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2019.01.15.제정, 조례 제685호)

* 덴마크 삼소섬 에너지 자립마을 (인구4,000여명, 11.4㎢면적의 섬)

- 1997년 에너지자립마을 목표 수립
- 주민 공동 및 개인 출자를 통해 풍력발전사업 시행
- 2006년 세계최초 100% 에너지 자립섬 달성
- 2030까지 화석연료 제로섬 목표

③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 주민참여, 종합계획의 수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참고사례〉

-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2018.10.05.제정, 제2485호)
- 신안군에서 100kW이상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는 지역주민과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④ 온마을이 실천하는 재활용 & 새활용

-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부여
- 다가구 주택지역에 분리수거 시스템 운영으로 폐자원 재활용율 제고
- 수거된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지원

〈참고사례〉

- * 서울 은평구 그린모아모아 재활용품 배출 관리
 - 다가구 주택지역에 자원관리사 배치하여 8종의 자원분리배출 시행
 - 자원관리사는 주민교육 및 물품관리 등 업무 수행 (주1회, 일4만원 보상)
 - 참여주민에게는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증정
 - 생활폐기물 감량 우수동에 절감된 처리 비용을 인센티브로 보상
- * 한국업사이클센터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듦으로써 환경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 지원, 업사이클 제품 전시 및 홍보, 업사이클 강좌 운영

5. 다음과 다음을 지키는 도시재생

- 1 스마트 압축도시 전환
- 2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 3 공감하는 골목만들기
- 4 백년상권을 만드는 상생협약

추진배경

구도심의 쇠퇴, 도시의 외곽 개발로 인한 교통 물류비용 증가, 도시 주변 녹지의 감소 등에 더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밀려나는 원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2020년 기준 전국 3512개 읍면동의 약 70%에 달하는 지역은 도시쇠퇴를 이미 겪고 있으며, 20%를 넘는 지역에서는 도시쇠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일적 재개발 혹은 신도시 개발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물리적 환경개선의 패러다임 전환, 주민의 삶의 질 보장과 공동체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하다.

예시 공약

1 스마트 압축도시 전환

-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해 압축적이고 기능밀집적인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 도시 외곽지역 개발을 억제하며,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통해 도시개발
- 고밀도 개발, 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 활성화 중심으로 도시재생

〈참고사례〉

- * 독일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 (라이프치히시(Leipzig), 드레스덴시(Dresden))
- *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 마을, 아다치구 하나하타 단지

2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 지역사회 문제를 끄집어내 직접 참여해볼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 현장 연계 교육을 병행하는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

〈참고사례〉

- * 전주시 공공디자인 학교 (2008)
- * 시흥시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 (2009)

3 공감하는 골목만들기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청소, 주차, 안전문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우리동네 골목 환경개선 사업 추진
- 골목 가꾸기, 골목청소, 밥상모임, 나눔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골목중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참고사례>

- * 영등포 택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
- * 인천광역시 주민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 만들기
- * 성동구 행복한 골목만들기

4 백년상권을 만드는 상생협약

- 지역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
-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참고사례>

- * 서울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 * 순천시 덕연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 * 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6. 돌봄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 2 공동체를 살리는 지역재단 설립
- 3 주민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 4 마을에서 찾은 어르신 일터와 쉼터
- 5 온마음이 함께하는 아이돌봄

추진배경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발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시작되었다. 이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화되었는데, 복지재원의 한계와 함께 자원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복지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시 공약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협의체의 구성
-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

〈참고사례〉

- *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20.06.03.제정, 제1387호)
- * 부산 북구 365 북구케어 (4대분야 36개 사업 진행)
 - 일반 가정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는 케어안심주택 서비스
 - 상시 병원진료가 필요한 분을 지원하는 콜(Call) 병원 동행 서비스
 - 진료가 필요한 환자와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
 - 돌봄활동가 양성 및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플러스 센터 운영

② 공동체를 살리는 지역재단 설립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기부금으로 복지소외계층 지원 및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기반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
- 행정은 민간중심 지역재단 출범 지원, 지역재단 연계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참고사례〉

- * 시흥시 1%복지재단 (2005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발, 기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보육원 등에 직접 기부하던 방식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필요한 곳 지원
-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5.02.23.제정, 제1939호)

③ 주민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 의료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
-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동네 주치의 제도 구축

〈참고사례〉

- *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28.제정, 제2512호) : 고양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수행
- * 안성의료협동조합, 안산의료생협의 건강주치의제도 : 건강검진 후 질병 혹은 이상징후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병화를 예방하고 추이를 관찰함

④ 마을에서 찾은 어르신 일터와 쉼터

-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중 1위, 같은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3.1%로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 2022년 기준 65세 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이 19.5%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및 건강관리에 취약
- 도시지역이 노후 주택이나 농어촌 지역의 유휴공간,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의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우울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참고사례〉

- * 서울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 서울 성동구가 70%를 출자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 4개분야 15개 사업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 71세 정년보장 및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여가시간을 고려한 일4시간 격일 근무 등으로 어르신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
- * 서울 금천구 보린주택은 2021년 기준 6호점까지 준공, 97세대 입주
 - 만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 홀몸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 * 당진시는 읍면동 11개소에 어르신 공동보금자리 마련, 화재보험가입과 난방비 등 운영비 보조

⑤ 온마을이 함께하는 아이돌봄

-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보육 확대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 보장
- 도심공간 내 아동돌봄 공간의 획기적 확충

〈참고사례〉

- * 서울 동작구 '보육청'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청으로 전환하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 채용일원화, 승진과 전보 체계 도입, 보육교사 대비 아동 수 비율개선
- * 서울 강동구 '꿈미소'
 - 2022년 기준 10개소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낮에는 어르신, 오후 4시 이후에는 아동들의 돌봄공간으로 활용 중. 공간 공유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 소통프로그램도 진행
 - 시간제 교사 배치, 아동들의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지원

7. 학교혁신, 배움혁신

- 1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방교육자치모델 실현
- 2 학교밖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 3 마을에서 배우는 사람책과 ‘내일상상 프로젝트’
- 4 평생학습도시, 책 읽는 도시
- 5 미래 인재를 키우는 디지털교육

추진배경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육자치가 시작되었다. 아울러, ‘교실붕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 공교육 혁신모델로 혁신학교가 시작되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교육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배움의 장이 학교를 넘어 마을로 확장되고 평생교육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예시 공약

1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방교육자치모델 실현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지역소멸지역의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대책 필요
- 교육경비보조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한 지방교육자치모델 구축

〈참고사례〉

* 구례군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 구례교육발전포럼 운영 : 지방정부가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정책전문관 채용,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2 학교밖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교육자원, 인적자원을 발굴
- 마을 내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혁신학교 및 방과후학교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

〈참고사례〉

* 오산시 교육재단 혁신교육지원센터 : ‘시민참여학교’, ‘꿈찾기멘토스쿨’, ‘미리내일학교’, ‘오산메이크교육센터’ 등 운영

3 마을에서 배우는 사람책과 ‘내일상상 프로젝트’

- 약속1. 지역공동체 내에서 인생 경험을 나누고 멘토링하는 사람책 운영
- 약속2. 청소년이 지역 공동체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보며 진로를 탐색하는 ‘내일상상 프로젝트’운영

〈참고사례〉

* 서울 노원구 : 전국 최초 상설 사람책 도서관 운영, 530여명의 사람책 등록

〈참고사례2〉

* 희망제작소 '내일상상 프로젝트' 운영 (2016년~2021년)

- 순창, 장수, 진안, 남원, 진주 교육단체와 함께 진로탐색 프로젝트 운영

4 평생학습도시, 책임는 도시

- 약속1. 지역 공동체 내에서 배움과 나눔이 있는 학습도시 구현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 부여
- 약속2. 걸어서 10분 거리에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책을 빌려주는 곳에서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도서관의 혁신

〈참고사례〉

* 수원시 : '누구나학교', '뭐라도 학교'

* 오산시 : 찾아가는 배달강좌 '런앤런', '오산백년시민대학'

* 논산시 : '시민기본평생학습장학금' 지급

* 시흥시 : '시흥아카데미' 온라인 강좌 운영

〈참고사례2〉

* 서울 관악구 : 작은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및 어르신 자서전 제작, 독서동아리 육성, 책잔치 등 독서문화진흥사업 전개

* 전주시 : 책의 도시 전주 비전 수립, 다양한 주제 도서관 개관 및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서관 여행프로그램 개발

5 미래 인재를 키우는 디지털교육

- 코딩, AI, 로봇, 드론, 3D프린팅, XR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거점 기관 운영

〈참고사례〉

* 서울 송파구 미래교육센터 운영

* 서울 서대문구의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 파견으로 수업 보조

8. 안전도시

1 리질리언스(Resilience)시티 구축

2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3 재난·안전 통합자원관리

4 시민안심보험 확대

5 폭력예방 건강도시 구현

추진배경

현대사회는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산업화 및 도시화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각종 재난의 위험성과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나아가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기도 어렵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재난관리 조직과 체계를 운영하면서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부터 다양한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며 통합형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 위주로 되어 있는 인력구조는 전문기술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도록 지휘체계의 단순화, 통합된 재난통신 체계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난관리에 관한 역할분담이 요구되며, 나아가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과 관리자원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운용,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 시스템 마련 등이 요구된다.

① 리질리언스(Resilience)시티 구축

- 기후변화, 생산성 한계, 인구 고령화, 도시집중화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위협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시·군·구청 운영 약속

〈참고사례〉

- * 미국 미네소타주 Saint Paul시의 Resilience Plan
- 도시의 자연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후 변화위험에 대응
- * 회복탄력성 도시 양천을 꿈꾸며, 김수영(2021)

②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 지방자치단체, 주민, NGO,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 주민과 수요자 중심의 재난관리 교육, 훈련계획 수립과 운영, 평가회의 개최

〈참고사례〉

-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2012.05.22. 제8181호)
- 서울시 동단위별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으로 교육 및 훈련 운영

③ 재난·안전관리자원 통합관리전략 마련

-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장비 등의 사전 확보 등을 통한 재난·안전자원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전략 마련

〈참고사례〉

- *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사례 : 광역방재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시군구 60여 개소에 소규모 비축창고를 건립해 각종 긴급재난 대응 및 응급복구 역할

④ 시민안심보험 확대

-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제도를 통해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참고사례〉

- * 논산시 시민안전보험제도 운영
- * 보은군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

⑤ 폭력예방 건강도시 구현

- 아동학대를 비롯한 각종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 대응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으로 양성평등 성인식 함양 교육과 성인식 개선 교육 실시

〈참고사례〉

- *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2021.11.10. 일부개정, 제1529호)
- *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2021.02.19 제정, 제3576호)
-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http://shp.mogef.go.kr>)

9.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지키기

① 생활임금제 도입

② 비정규직 노동자,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추진배경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할 능력과 의지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정임금 보장은커녕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사용자간 첨예한 대립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임금근로자 2,099만2천명 중 한시적, 시간제 근로자가 806만6천명으로 38.4%를 차지한다. 월평균 임금도 정규직은 333.6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76.9만원으로 정규직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동 불평등을 해소하며, 보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정책들을 선도하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끌 필요가 있다.

예시 공약

① 생활임금제 도입

- 가족의 삶과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으로 저임금 하한선을 높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시행
- 정기적인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하고,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참고사례〉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2020.12.31. 일부개정, 제1348호)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2020.07.17. 일부개정, 제1529호)

② 비정규직 노동자,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정규직 전환 추진
-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돌봄·보육·요양보호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마을버스 운송 종사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

〈참고사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07.17. 일부개정, 제1529호)
-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09.10. 제정, 제1377호)

10.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도시

- ① 인권도시 현장, 인권조례제정
- ② 아동, 여성친화도시
- ③ 장애인 이동권 실질적 보장
- ④ 공공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가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기구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의 목적과 방법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모든 행정부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과 맞닿아 있다. 추상적 수준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여성·장애·노인·주거·어린이와 청소년·이주민 등 행정 전 영역에 걸쳐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가치가 바로 인권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010년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자치단체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나섰다. 2020년 기준 12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인권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지방정부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회와 인권옴부즈만 등이 권한을 갖고 활동하도록 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가운데 시민의 삶과 밀착된 인권정책을 펼쳐야 한다.

예시 공약

① 인권도시현장, 인권조례제정

- 인권 근거규범의 확인, 자치단체의 인권 책무 확인, 인권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인권의 제도화(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의무화 등),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방침 등을 규정한 인권조례 제정
- 인권 전담부서 아래 시민이 원하는 인권정책, 사회적 약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인권 현장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참고사례〉

-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2021.9.30. 일부개정, 제8172호)
-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20.12.15. 일부개정, 제5623호)

② 아동, 여성친화도시

-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개발, 아동권리 전담 상설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 추진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재지정) 구현

〈참고사례〉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5.11.12. 제정, 제1103호)
- *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9.09.23. 제정, 제1635호)

③ 장애인 이동권 실질적 보장

- 사회적 기본권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문제를 인식하고 장애인의 이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편의 수단, 시설, 시스템 마련

〈참고사례〉

*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20.06.22 제정, 조례 제3376호)

④ 공공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

- 지방단체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전반에 등에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UD) 도입

〈참고사례〉

*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7.11.21 전부개정, 제1278호)

*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9.11.07. 조례 제1287호)

11. 꿈꿀 수 있는 청년도시

① 청년기본소득, 청년수당

② 청년 창업공간 조성

③ 청년청 설치

④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추진배경

우리나라 청년들의 모습을 낙관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가 현재 마주한 도전과 과제를 해결해나갈 주체는 결국 청년이다. 그러나 2014년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안 규모가 355조 8,000억 원이었고, 노인 관련 예산은 6조 3,000억 원이었는데, 청년 관련 예산은 1조 3,000억 원에 불과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2022년도 예산안은 23조5000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선심성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청년 스스로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청년 자유헤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① 청년기본소득, 청년수당

-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 지원 정책 마련
-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실시

〈참고사례〉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021.12.13 일부개정, 제3705호)

② 청년 창업공간 조성

- 청년 창업가를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창업 준비 및 지원 공간 조성
- 청년위원이 함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종합상담 지원체계 구축

〈참고사례〉

*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2020.12.16 제정 제1425호)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2021.08.05 일부개정, 제2316호)

③ 청년청 설치

-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기구 설치 및 운영
- 청년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활동, 노동, 주거, 공간 등 분야를 나누어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청년친화도시 기본정책 마련

〈참고사례〉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2022.03.10 일부개정, 제8353호)

*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2019.12.30 제정, 제1707호)

④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 추진

〈참고사례〉

*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2021.12.23 일부개정, 제1952호)

12. 공공행정혁신

① 혁신적 인사 평가 시스템 구축

② 감사제도 개혁

③ 시민 옴부즈만 도입

④ 사회성과보상제 본격화

추진배경

국가운영과 공익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조직은 각종 인허가 민원 업무나 막대한 예산 운용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행정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쌓고,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효능감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실형을 사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행정조직의 내부감사 제도를 통해 회계감사가 이뤄지는데, 역으로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한 소극행정, 면피행정에 빠지기도 한다. 이에,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와 감사제도의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된다.

예시 공약

① 혁신적 인사 시스템 도입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도입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 입체형 인사평가 시스템,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희망부서 우선 전보 도입

〈참고사례〉

* 서울 도봉구 : 현 부서직원과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별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평가자를 선정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입체형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 채용과정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청탁, 관행적 비위 등 채용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행정전문가 및 대학교수로 이뤄진 제3자 고용감찰관도입

② 감사제도 개혁

- 각종 인허가 등 민원관련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모니터링 시스템인 시민 감사관 도입
- 지방정부간 교차 감사를 통해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운영

〈참고사례〉

* 서울 성동구 : 상시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해피콜 제도'도입, 구정평가단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결과를 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피해익명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 서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의 '동북4구 자체감사 업무협약'(2014년)

*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2019.12.12.제정, 제2451호)

③ 시민 옴부즈만 도입

- 시민의 '고충민원'을 올바르게 처리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서비스 개선 및 행정 통제와 개혁에 기여하는 시민 옴부즈만 도입

〈참고사례〉

* 서울 구로구 '옴부즈맨' : 구청 직제와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운영. 직권감사, 구민감사, 의뢰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음. 고충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각종 용역계약 과정에 대한 청렴계약 감사와 평가도 진행함. 행정처분 청문과정에도 옴부즈맨이 참여하여 주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2019년부터는 '인권옴부즈맨'을 위촉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0.12.30. 제정, 제1546호)

④ 사회성과보상제 본격화

-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정책의 효용성을 높여 예산부담과 행정비용 절감
- 민간투자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공헌에 기여

〈참고사례〉

* 서울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2014.03.20.제정, 제06871호)

* 수원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2017.09.27.제정, 제3700호)

내일을 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첫 선택

희망제작소 2022 시장학교 Mayors' Academy

개요

- 사업명** 민선8기 지방정부 당선자 워크숍
- 기간** 2022. 6. 10 - 6. 11(1박2일)
- 장소** 서울 혹은 세종시
- 참가인원** 민선8기 당선자 50명 (참모진 동행)

1. 왜 시장학교인가?

- 준비된 시장, 군수, 구청장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통합형 리더,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준비해 봅니다. 실사구시 정신으로 우리 사회 대안을 연구해온 희망제작소의 16년 노하우를 드리며, 지방정부 혁신리더 모임 목민관클럽을 통해 발굴된 자치혁신 12년 성과를 공유합니다.
- 당선자 워크숍 이후 정책 컨설팅과 국내외 성공모델 답사,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목민관클럽을 통해 전문가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지속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꿈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만으로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전과 변화에 당당히 맞서는 준비된 리더만이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2. 프로그램 개요

특강

- 성공하는 시장이 되기 위한 십계명
-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지방정부 역할

워크숍

주제1

- 3선 단체장의 지방정부 운영 핵심 노하우**
- 조직권, 인사권, 예산편성권, 의회 소통

주제2

- 임기4년 공약의 점검과 실천을 위한 로드맵 작성**
-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ABC

주제3

-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골목상권 살리기부터 일자리 주식회사 만들기
-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법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함께 가면 곧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루신 '고향' -

문의 02-6395-1441 박선하 연구원

지방자치 단체장의 연구와 소통의 장

목민관클럽

지방자치,
혁신의 시대를 향하다

목민관 창립취지문

1991년의 지방자치 부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단체장 5기를 맞아 우리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지역이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기초하여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와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행정 중심의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으로는 지역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차별화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개발과 대안 설계를 맡아줄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싱크탱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를 준비하기 위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목민관 클럽’(가칭)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목민관 클럽’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사구시의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각 지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의 협의체입니다.

‘목민관 클럽’은 정기적인 포럼(Forum)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공동 개발하며 지역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의제(Local Agenda)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지역별 정책과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목민관 클럽’은 또 정당과 정파의 벽을 뛰어넘어 각 정당 또는 무소속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정파적인 모임이며, 정당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생활자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 리더와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나서서 지방자치의 선진모델을 만들고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2010년 9월 7일

희망제작소 & 목민관클럽 회원 일동

★ 목민관클럽이란?

① 목민관클럽 목적, 구성, 운영

모임의 목적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력과 연구, 상호교류를 위한 모임

모임의 구성

지역, 정당을 초월하여 모임 취지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

- 공동대표, 운영위원, 고문, 감사, 협력기관, 사무국으로 구성

- 사무국은 희망제작소 운영

: 민선 5기 57명 (2014년 5월 기준), 민선 6기 57명 (2018년 5월 기준),

민선 7기 62명 (2022년 1월 기준)

모임의 운영

정기총회

규약의 제·개정과 임원 선출 등
모임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연간 사업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운영경비

회원의 회비로 각출

주요활동 방향

정기포럼

국내포럼

- 격월 정기포럼
- 중간지원조직 개선 등
14개 주제 검토

해외연수

- 연 1~2회
- 4개지역 16개 주제 검토

정책지원 강화

보좌진워크숍

- 정책적으로 보좌역량 강화
- 분기별 1회 개최

목민관클럽 청렴/반부패 활동

- 청렴확대를 위한 보좌진 노력과
상호 모니터링

단행본 발간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시리즈 발간

- 8개 주제에 걸쳐 8권의 단행본을
출판 추진
- 주제별 전문가 섭외 추진

현안대응

지방분권, 자치재정 확대

- 공개토론회 법률개정
지방정부전환 활동
- 공동행동 국고보조금 관련
공동행동

일상 홍보활동

- 블로그 운영
-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
- 정기간행물[목민광장] 발간

1) 정기포럼의 운영 (격월)

- 지방정부 주요 현안 또는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회원단체 간 정보 교류

2) 지방자치 전문지 『목민광장』 발행 (연2회)

- 정기포럼 주요내용, 각 회원 자치단체 소식 및 심층인터뷰, 국내외 혁신적 지방자치 사례,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민간싱크탱크의 다양한 연구결과 등을 담은 지방자치 전문 소식지 발행

3) 국내외 현장기반 연구와 국제회의 개최

- 포럼 이슈 중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연수 및 현장견학
- 국내 현안 및 국외 연수 내용 등을 기반으로 국제회의 개최
-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회원 단체 현장견학과 대안정책 연구

4)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 회원 지역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사업 추진
-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법령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능력함양을 위한 공동연수 진행 등

5) 기타

- 모임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출판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청원 등 공동대응

2 목민관클럽의 발자취

정기포럼

- 창립 후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67회 포럼 개최
-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 등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클럽 출범식

(2018.09.06.서울시)
: 지자체장 30명, 공무원 43명 참석

목민관클럽 2차 정기포럼

(2018.11.22~23.부산 동구)
: 우리가 꿈꾸는 도시, 스마트도시를 읽다.
: 지자체장 19명, 공무원 115명 참석

목민관클럽 3차 정기포럼

(2019.01.10~11.서울 서대문구)
: 2019 대한민국 트렌드 분석과
지방정부의 대응 방향
: 지자체장 28명, 공무원 105명 참석

목민관클럽 5차 정기포럼

(2019.06.20~21.충남 논산시)
: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
: 지자체장 12명, 공무원 38명 참석

목민관클럽 6차 정기포럼

(2019.09.26~27.경남 거제시)
: 유희공간 활용방안과 과제
: 지자체장 16명, 공무원 58명 참석

목민관클럽 7차 정기포럼

(2019.11.21~22.경기 광명시)
: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
: 지자체장 18명, 공무원 96명 참석

목민관클럽 8차 정기포럼

(2020.01.30~31.서울 도봉구)
: 민선 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지자체장 24명, 공무원 106명 참석

목민관클럽 9차 정기포럼.온·오프라인 병행

(2020.04.23.서울 종로구)
: 공중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
: 지자체장 13명, 공무원 81명 참석

목민관클럽 10차 정기포럼.온·오프라인 병행

(2020.07.02.경기 여주시)
: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시대 전망과
새로운 기회
: 지자체장 18명, 공무원 33명 참석

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국제포럼

(2020.09.10~11.서울시)
: 목민관클럽 지역혁신 10년 회고와
향후 10년 전망
: 지자체장 22명, 공무원 185명 참석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

(2020.11.05~06.충남 당진시)
: 한국형 뉴딜 지역화 전략
: 지자체장 16명, 공무원 76명 참석

목민관클럽 13차 정기포럼

(2021.01.07.희망제작소_온라인)
: 시민주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 지자체장 24명, 공무원 52명 참석

목민관클럽 14차 정기포럼

(2021.03.07.희망제작소_온라인)
: 지방이양일괄법제정 이후 재정분권
강화 방안(토론회)
: 지자체장 25명, 공무원 44명 참석

목민관클럽 15차 정기포럼

(2021.05.13.희망제작소_온라인)
: 2050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세부 실천 방안
: 지자체장 26명, 공무원 56명 참석

목민관클럽 16차 정기포럼

(2021.07.08.희망제작소_온라인)
: 2030청년세대 이해와 지방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 지자체장 14명, 공무원 37명 참석

목민관클럽 17차 정기포럼

(2021.09.09.희망제작소_온라인)
: 코로나19 이후 지역 일자리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
: 지자체장 18명, 공무원 36명 참석

목민관클럽 18차 정기포럼

(2021.11.11.희망제작소_온라인)
: 저출생·고령화 실태와 지방정부
대응방안 모색
: 지자체장 12명, 공무원 35명 참석

목민관클럽 19차 정기포럼

(2022.01.20.서울시)
: 민선 7기 자치혁신과 미래전망
: 지자체장 15명, 공무원 69명 참석

단체장
총 350명 참석

공무원
총 1265명 참석



2010년 창립총회 서울 프레스센터



2011년 민선5기 4차포럼 인천 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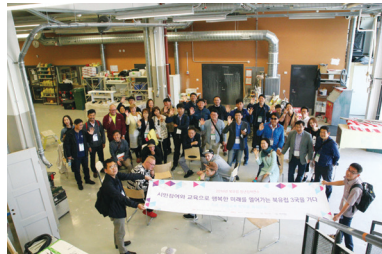
2012 민선5기 집담회 사회적경제



2012 민선5기 현안대응 자치분권 입법청원



2014 민선6기 출범식 서울 강동구



2016 민선6기 해외연수 핀란드 직업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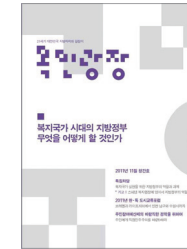
2018 민선7기 출범식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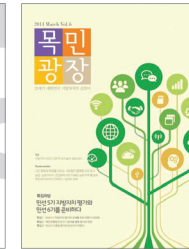
2020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

목민광장 발행

- 년 2회 지방자치 전문지 <목민광장> 발행
 - 2022년 상반기까지 제22호 발행
 - 지방자치 핵심 이슈 심층 분석 및 정책대안 모색, 회원 단체 소식 등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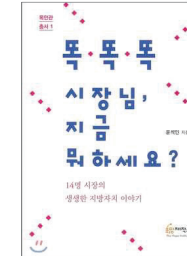


목민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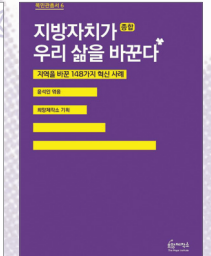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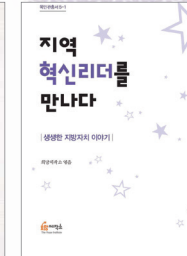


목민관총서 발간

-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총 6권의 총서 시리즈 발행
 - 2013 제1권 똑똑똑 시장님, 지금 뭐하세요?
 - 2014 제2권 똑똑똑 군수님, 지금 뭐하세요?
 - 2014 제3권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2018 제4권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증보판)
 - 2020 제5권 지역혁신 리더를 만나다
 - 2022 제6권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종합판)



목민관총서



열정을 가진 민선8기 시장, 군수, 구청장님과 함께 합니다.



0397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성산동 114-14)

T. 02-3210-0909 F. 02-3210-0126 E. hope@makehope.org